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2501-01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수범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전라북도 완주군

1~20

사람이 모이는 곳 農토피아

로컬푸드와 또다른 성장동력인 완주소셜굿즈 2025 플랜 추진

로컬푸드의 개념을 문화, 교육, 돌봄육아, 에너지 등 군민의 삶 전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2025년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를 형성한다!

세종특별자치시

21~36

로컬푸드 공공급식 369 프로젝트

성공적 로컬푸드 운동에 기반한 푸드플랜 확대 전환

학교, 공공급식 분야의 지역공급체계 구축,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을 통해 '자급자족, 푸드케어 명품도시' 를 꿈꾼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37~52

시민 사회와 함께 하는 푸드플랜

푸드플랜 추진의 핵심 동력인 민간 파트너 네트워킹이 핵심

지역 먹거리정책 컨트롤 타워 마련, 지역사회 혁신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순환과 공생의 공동체 강화와 지속가능한 도농상생 사회를 실현한다!

충청남도

53~66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가 보장되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기초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다양한 직거래 인프라를 활용

광역급식센터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순환가공식품을 육성하여 공공급식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먹거리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한다!

#1

사람이 모이는 곳 農토피아 완주

1 추진배경

- 2009년 전체 농가 중 1ha 미만 72.8%, 65세 이상 36.5%의 농가 현실을 극복하고 농업 농촌의 도약을 위해 로컬푸드를 사회적 화두로 부상시킴
: 기존 ‘생산과 소득지원’ 정책에서 ‘유통과 소비촉진’ 중심의 농정 추진 → 중소농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 추진

2 추진 경과 및 성과

- 2008년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2009년~2013년) 수립
→ 전면적인 로컬푸드 정책 추진
- 2010년 로컬푸드팀(5명) 및 농촌활력과 신설
- 2012년 농업회사법인 완주로컬푸드(주) 출범 → 2014년 협동조합 전환
-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2017년말 기준 505억원 매출), 농가레스토랑 4개소, 농민 가공센터 2개소 운영 → 2,500 중소가족농, 100개 생산공동체, 40개 마을회사, 11개 지역공동체, 10개 노인두레농장 조성
- 2018년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수상
- 2017년말 기준 로컬푸드에 2,500여 중소농가 참여 등 3,185개의 일자리 창출, 연간 600억원 규모의 지역순환경제 효과

3 추진 주체 및 체계

- 행정 : 농업농촌식품과(먹거리정책), 공동체활력과(사회적경제)
- 중간지원조직 · 거버넌스
: 완주군로컬푸드협동조합과 관내농협(로컬푸드직매장), (사)건강한 밥상 (지역먹거리 꾸러미 직배), (사)세상을 바꾸는 밥상(식·농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기존 사회경제조직 내실화, 신규 공동체 육성)
- 공공급식 : (재)온고을로컬푸드공공 · 학교급식지원센터

4 향후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내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 취약지구 및 취약계층 대상 로컬푸드 제공
⇒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의 지역식재료 활용 비율 증가, 공동식단체 도입을 통한 기획 생산 체계화
- 푸드플랜 이후 ‘소셜굿즈’ 활성화 계획 추진
⇒ 소셜굿즈활성화 : 로컬푸드 개념을 문화, 교육, 돌봄육아, 에너지 등 국민의 삶 전 분야로 확대



#1 사람이 모이는 곳 農토피아 완주

1

완주군 현황 및 추진배경

변화하고 진화하는 도시 완주

완주의 인구는 9만5천명으로, 이중 17%인 16,847명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지역이다. 이러한 작은 도시 완주군에 외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유사한 규모의 대부분 지자체가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반면, 완주군은 2011년 8만6천명이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0만을 넘어 2025년에는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를 꿈꾸고 있다. 타지역 대부분이 대농중심의 정책을 펼칠 때 완주는 2009년부터 로컬푸드를 사회적 화두로 부상시켰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2017년 포스트 로컬푸드인 '완주소셜굿즈 2025' 플랜을 수립하며 푸드플랜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여 로컬푸드의 개념을 완주군민의 삶 전분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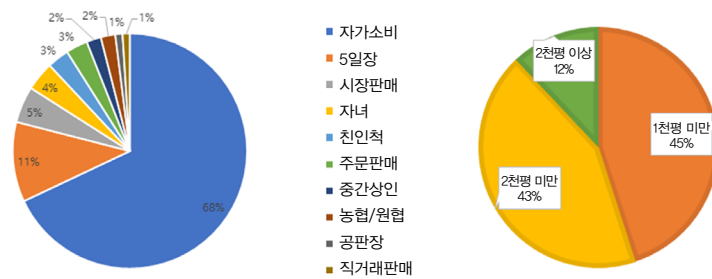


월 150만원 버는 월급 받는 농부 3,000농가 육성 추진

지금은 이서면 혁신도시 유입으로 인구 및 사업구조에서 변화가 있지만, 로컬푸드를 처음 시작할 때의 완주 농산업은 대형유통업체 및 산지수집상에 끌려 다니는 여타 시군과 다르지 않았다.

2009년 완주군이 로컬푸드를 시작할 때 완주군 전체 농가 수는 9,700호 였다. 이중 1ha 미만 생산농가는 6,200농가(72.8%)였고, 65세 이상 농가구성도 36.5%에 달했다. 이대로 20년이 지난다면, 완주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기 시작했다.

[완주군 2009년 65세이상 고령농의 농업경영실재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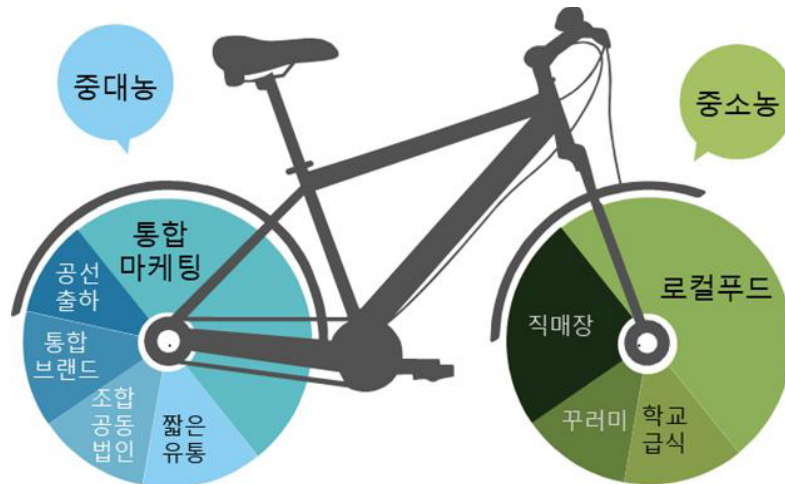


완주군은 2009년 지역농정 혁신을 위한 약속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은 여섯 질문을 던졌다.

- ① 소수의 시장 지향적 상업농만으로 지역농업은 유지가능한가?
- ② 수요에 부응한 기획생산을 하게 할 수는 없는가?
- ③ 책임있는 유통시스템은 어떻게 가능한가?
- ④ 중소농, 고령농의 정책소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⑤ 농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 ⑥ 농촌마을 및 지역사회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기존의 농업정책이 '생산과 소득지원'에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농업은 '유통과 소비촉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유통체계의 변화가 필요했다. 완주군의 소규모 농가 정책은 로컬푸드로, 중규모 이상의 전업농은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에서 답을 찾았다. 그렇게 탄생한 슬로건이 '월 150만원 버는 월급받는 농부 3,000소농 육성'이다.

[완주군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 투트랙 전략]



2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경과

20년 가는 농업정책의 수립

지역 및 농촌개발은 추진 속도가 느려, 결실을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와 일관된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완주군은 민선 4기('06년~'10년)와 5기('10년~'14년)에 시민대상 안전먹거리 공급을 목표로 로컬푸드 소비 확산에 집중했고, 박성일 군수로 이어진 민선 6기는('14년~'18년) 학교급식 확대, 7기('18년~'22년)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공공급식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일관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의 완주군 푸드플랜 정책은 2008년에 수립한 '약속 프로젝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존 중앙 의존 방식의 획일적인 사업방식을 개편하고, 군비 500억원을 투입한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를 수립해 '전면적인 로컬푸드 실현'의 기회를 만들었다.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프로젝트 2009~2013]

5대 정책	정책목표	세부혁신시책
생산혁신	생산비절감 친환경 전환	■ 쌀-한우 경쟁력 동반강화 대책 - 경종·축산간 지역자원 순환시스템 구축
유통혁신	소농 3천농가 월 150만원 소득	■ 전면적인 로컬푸드 실현 - 10년 내 지역농산물의 30%이상 로컬푸드 유통
경영혁신	기금 100억원 부채농가 지원	■ 농가경영회생기금 조성, 경영실태조사 - 무이자 경영회생자금지원 및 맞춤형컨설팅 지원
활력증진	마을회사 100개 농업6차산업화	■ 도농교류거점 마을 회사 100개소 육성 - 도농교류 거점마을 육성 및 상호 연계
복지혁신	현장맞춤 복지 생산적 복지지원	■ 도농교류거점 마을 회사 100개소 육성 - 도농교류 거점마을 육성 및 상호 연계

로컬푸드 추진 시스템 구축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했다. 정책의 대상은 0.5ha 미만의 소농·고령·여성농 3,412호로 특정하고, 기획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체계 구축에 가장 힘을 쏟았다. 2010년 7월 로컬푸드 담당 및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 각 부서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했다. 초기 직매장 개설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했고, 지자체가 직접 나서 부지 매입 및 시설을 설립하고 민간조직에 위탁운영하는 공격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했다. 농가레스토랑, 농민가공센터, 직매장 등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 분야에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완주군 로컬푸드의 경쟁력을 키웠다.

2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경과**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추진 전략]

구분	정책명	세부내용	비고
정책 목표	대상	· 영세소농, 고령농, 여성농 - 0.5ha미만 농가 3,412농가(1차)	- 장기적으로 1ha미만 농가 참여 - 상업농과 초기단계 분리대응
	목표	· 월 소득 150만원 보장 (로컬푸드를 통한 소득증대 분)	- 1단계 3,000가구
정책 수단	기획 생산	· 다품목소량생산, 농민가공	- 조직화 :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관계 시장	· 직판장, 꾸러미, 공공급식 등 · 농가레스토랑/음식점	- 직판중심(6차산업화 지향)
	물류 시스템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 생산·유통·소비 통합컨트롤타워
조직 육성	민간	· 공공형 운영조직	- 로컬푸드 협동조합, 재단법인 등
	관 (행정)	· 농촌활력과, 로컬푸드 담당	- 2010. 7 농촌활력과 신설
제도 정비	조례 제정	·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조례 외 · 완주군 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	- 현재 총 5개 조례 제정

민간주도 로컬푸드 협동조합 설립 및 직매장 운영

완주군은 2012년 6월 농업회사법인(완주군, 10개 농·축협 출자)인 완주로컬푸드(주)를 출범하며 중·소 가족농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고 완주군의 소비자들이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믿고 살 수 있는 직매장 개설을 추진하였다.

이후 농민이 주인인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4년 1월 조합원 1,044명이 십시일반하여 출자금(6억원)을 모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파죽지세로 성장하였다. 전주권을 중심으로 자체 운영하는 직매장은 6개소로 확장되었고,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가레스토랑도 4개소로 증가되었다. 농가들이 나서니, 지역농협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각 읍면별로 보유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샵인샵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완주군 읍·면 단위 지역민에게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의 5년간 누적 매출은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2천억이 넘었고, 연간 500억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하여 판매금의 90%를 농가에게 환원하고 있다. 매장이용을 통해 발생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부가적인 수익을 고려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는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

- 개소수
 - 독립매장 8개소(광역형 직매장 1개소 포함)
 - 샵인샵 매장 4개소
- 주요 운영 주체
 -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 6개소
 - 관내 농협 : 6개소
- 연매출현황 : 2017년말 기준 505억원(전문매장 399억원)
- 참여농가수 : 2,500명

지역 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민가공센터 운영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로 농식품을 생산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두부를 만드는 7개 마을과 장류, 치즈, 김치류 등을 만드는 농민가공업체들의 매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빵, 반찬, 편백 제품 등 신규 창업수요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완주군에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거점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시설·장비 구입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어려움 없이 상품을 생산하고 시장반응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농민가공센터는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기초부터 창업 인큐베이팅 등 아카데미를 수료한 205명의 교육생이 가공센터를 공동으로 이용하며 생산한 제품을 직매장 등에 판매하고 있다.

가공센터	고산 로컬푸드 가공센터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
위 치	고산면 고산천로 854-25	구이면 모악산길 24
규 모	총면적(4,469㎡), 공장(613.7㎡)	총면적(2,756㎡), 공장(494.3㎡)
운영시기	2012년 6월 개장	2015년 5월 개장
추진사업 (소요예산)	시군공동 제조가공시설사업 (12.8억원)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 (12.6억원)
운영인력 (7명)	2명(교육·행정매니저)	2명(교육·행정매니저)
	운영팀장 1명	
공간구성	반찬, 습식, 건식, 제과제빵 실	반찬, 습식, 건식, 건조실
운영방식	행정재산 사용허가 - 3개 공동체 96명	행정재산 사용허가 - 2개 공동체 76명
	농업기술센터지역(농촌지원과/식품지원팀)	

가공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 중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또는 공동체를 육성해 제품을 만드는 사례가 증가했고, 경력단절여성이 진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전문적인 인큐베이팅과 컨설팅으로 제품의 질이 올라가니, 상품을 찾는 소비자도 늘었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으로 식품생산 부가가치가 제고되고 지역에 환원되기 시작했다.

농민가공센터 공동체의 매출은 2014년 579백만원에서, 2017년 1,092백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 매출액 기준 77%(상품판매 수수료 10%, 부가가치세 10%, 사용료 3%)인 841백만원이 농가에게 환원되었다. 완주군은 계속해서 다양한 농산물 가공센터를 늘려가고 있다.

특화된 가공품 육성을 위해 2016년 소이푸드 가공센터를 열어 진짜두유 등의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고, 2017년에는 농업인전문가공센터를 설치하여 과실공방과 축산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식초 및 소스를 생산할 발효특화가공센터를 추가 건립해 운영할 예정이다.

[가공센터 생산 시제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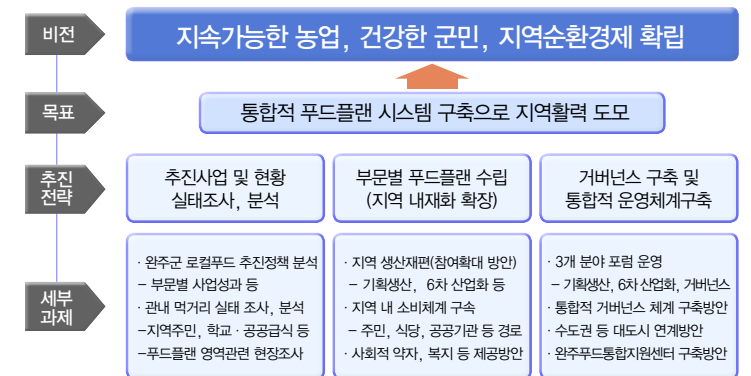


완주군 전체의 균일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 추진

민선 7기의 가장 큰 고민은 '취약지구 및 취약계층'에게 로컬푸드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확대를 통해 관내의 다수의 직매장을 설치했지만, 모든 지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먹거리 보장은 되지 않았다. 산촌지역으로 분류되는 고산, 운주, 동상, 비봉, 화산의 경우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자연스럽게 참여율도 낮은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수립해 완주군 일반시민, 학교·공공기관, 사회적 약자 모두에게 동일한 먹거리 접근성을 제공할 방법 마련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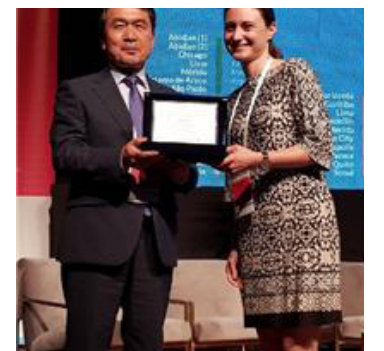
푸드플랜종합계획은 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관내 로컬푸드 자원과 지역소비자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며, 기존에 조직화된 생산기반에 근거해 지역 공동체를 재결성해 먹거리복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산촌지역의 먹거리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대상이 되고, 청년보부상(로컬푸드 이동마켓)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먹거리가 보장되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은 지역식재료 활용 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며, 공동식단체를 도입해 기획생산을 체계화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실태조사부터 실증실험까지 2019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완주군 로컬푸드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 질 것이다. 로컬푸드가 3천 영세소농의 생활 안정으로 소멸해가는 마을을 지켰다면, 완주푸드플랜은 미래 100년의 부흥을 위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푸드플랜 수립전략(안)]



세계가 인정한 먹거리 정책: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 수상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은 뉴욕 런던 파리 서울 등 62개국 163개 도시가 가입한 세계협약기구로 먹거리체계를 생산부터 소비까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자는 원칙으로 매년 우수도시를 선정해 밀라노 협약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9월 4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의 2018년 수상자로 완주군과 서울시가 나란히 선정됐다. 완주군이 수상한 거버넌스 특별상은 '먹거리'와 관련된 완주군의 전후방 사업 육성과 행정, 현장실행조직,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가족소농, 마을기업과 두레농장을 육성해 지역 생산력을 복원시키고, 12개의 직매장과 6개의 레스토랑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시장을 창출한 성과, 그리고 민간과 관이 함께 풀어나간 거버넌스 성과를 높게 평가 받은 것이다. 이는 모두 농산물을 바르게 소비하자는 작은 마음이 이뤄낸 큰 성과이다.

완주군의 작은 움직임이 전 국민의 밥상에 변화를

'완주'하면 '로컬푸드'가 연관검색어처럼 따라 붙었다. 혹자는 완주군 먹거리 정책은 '67만 전주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배후도시형 농산물 유통개선 성과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완주 로컬푸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완주는 지역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집중했고, 그 실마리를 '소농의 안정화'에서 찾았다. 최근 전국적으로 화두가 된 '지역 푸드플랜' 관점에서 농산업을 육성해온 것이다.

완주는 무너진 지역생산력을 복원했다. 2,500여 중소가족농, 100개의 생산공동체, 40개의 마을회사, 11개의 지역공동체, 10개의 노인두레농장 등을 조성하고, 공공형 농민가공센터 2곳을 설치하였다. 신뢰의 척도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완주로컬푸드인증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생산자-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관계시장도 창출했다. 완주권 6개소와 전주권 6개소의 직매장을 설립했고, 레스토랑 6개소와 꾸러미 1개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완주·전주 시민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평균 540만회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공공급식센터를 통해 12,000명의 학생과 6,000여명의 취약계층 및 아동에게 로컬푸드를 공급 중이다.

또한, 올해 11월부터는 완주군청 구내식당을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지역 농가의 식재료만을 활용하는 농가레스토랑 방식으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며, 공공기관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 선도모델을 창출하였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완주군청 구내식당]



2017년 말 기준 로컬푸드에 2,500여 가족소농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600억원 규모의 지역순환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로컬푸드 생산, 안전, 가공, 유통, 소비, 도농교류분야에서 3,185개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약 300여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활동 중이다. 먹거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2014년부터 4년간 완주를 찾은 벤치마킹 인력은 116,198명에 이른다. 완주군에서 확인된 먹거리 지역화의 가능성과 실행 로드맵은, 우리나라 90개 도시에 188개 직매장이 건립되는데 단초가 되었다. 그리고 국가농정정책으로 채택되어 2018년에는 9개 도시의 지역푸드플랜수립(국가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틈나바퀴처럼 맞물린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사람이 힘이다'. 로컬푸드 정책 시작부터 지금까지 완주가 강조해 온 일은 '지역 내 전문가' 육성과 '거버넌스 구축'이다. 행정력으로 사업을 착수 할 수는 있으나, 결국 일을 풀어나가는 것은 요소요소에 있는 사람들이며, 민간 조직이다.

완주군은 2008년 로컬푸드 업무를 전담할 민간 전문가 채용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행정조직을 개편하며 로컬푸드팀(5명)을 신설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지금은 업무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팀을 중심으로 먹거리 관련 10개의 팀이 협업을 실시하며 행정 내에서도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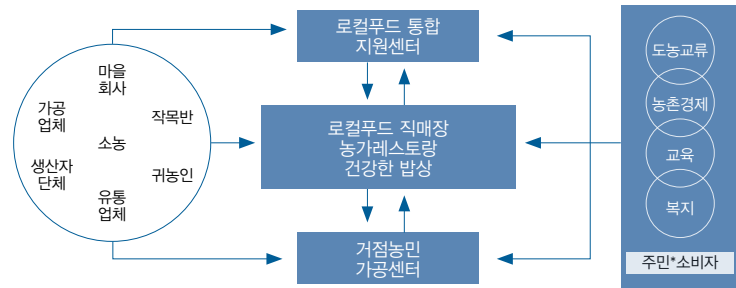
[완주군 푸드플랜 추진 행정협업 주요내용]

분야	협력부서	주요내용
교육아동	• 아동청소년팀 • 보육지원팀	- 아동급식 지원 및 식생활 개선사업 추진
환경위생	• 청소행정팀 • 위생안전팀	- 식품안전 관리 및 음식물 폐기물 관리
사회복지	• 희망복지팀 • 노인복지팀	- 복지대상자 공공급식 제공
공동체 육성	• 귀농귀촌팀 • 사회경제팀 • 마을회사팀	-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농업부서	• 식품지원팀 • 과학영농팀	- 농민가공육진 및 안전성 관리 지원
보건소	• 건강증진팀	- 영유아 식생활개선 및 보충식품 제공

4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주체(거버넌스) 및 체계

이러한 탄탄한 행정을 기반으로 지역 내 공동체를 육성하여 실제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일반시민공급 영역에서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 관내 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 12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급식 분야에서는 (재)온고을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역먹거리 꾸러미 직배송은 (사)건강한 밥상에서 수행하고 있다. 식·농 교육 분야에서는 (사)세상을 바꾸는 밥상에서 소비자 식생활 교육 및 생산현장체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를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묶어내기 위해 2017년 12월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지역 내부자원을 활용해 사람을 키워내고, 사회적구성원간의 협동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시도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주 소셜굿즈 사업은 로컬푸드를 기반으로 생겨 난 공동체를 발판으로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의 내실을 다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신규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5

푸드플랜, 공공급식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한 문제 해결 TIPS

발로 뛰는 농정, 예측가능한 생산과 소비 계획 수립

완주군이 로컬푸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읍·면 지역의 영세고령농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행정 및 민간담당자를 정해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도출된 자세한 데이터 덕분에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완주군은 2015년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완주판 농림어업총조사를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완주군 농업경영체 실태조사는 읍면별, 농가별, 연령별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월별 또는 지역별로 필요한 인력수요도 산출 가능하다. 이후 푸드플랜 가공분야 및 소비분야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누적된 생산-유통 데이터를 매칭해 종합적인 푸드플랜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가 수년간 누적된다면, 고품화에 따른 생산전망 또는 농가 소득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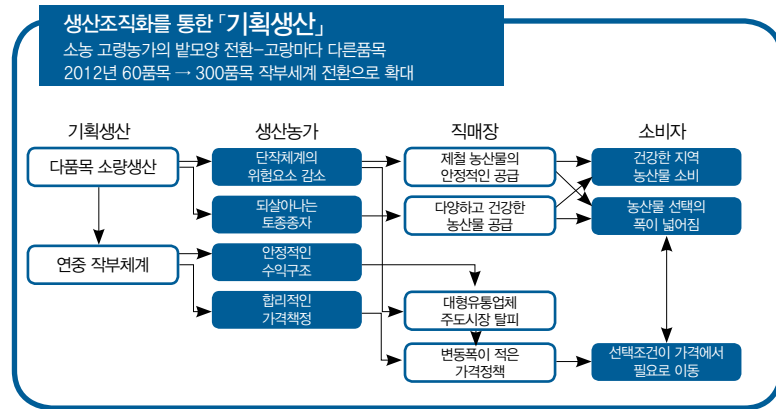
[완주군 농가조사 체계]

01	농가 기본현황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기본 정보 (농업경력/현황, 거주지 등)	1:1조사 모든 조사는 조사원을 통한 1:1대면조사 원칙 - 1차 : 11,385호, 2차 : 8,958호, 3차 : 8,384호
02	등록된 필지 및 재배(사육)계획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 시 필지정보, 재배(사육)예상 투수	조사진행 1차 : 전문기관에 의뢰(지역농업연구원) 2차/3차 : 완주군 자체 조사 진행
03	품목별 생산, 유통현황 조사 · 품목별 생산량, 출하량, 출하처별 출하비율, 판매금액, 차년도 계획 등 본 실태조사의 핵심 조사 내용	전문조사원 투입 국가 통계조사 유통현황자 중심으로 조사원 모집 (군청 행정지원과 협조)
04	농가 경영현황 조사 · 판매금액, 경영비,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농가소득 등 농가경영체 경영현황 전반	

3,000여 농가 조직화로 로컬푸드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불만은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은 다르다. 소비자들의 일상적 장보기가 가능해지면 최소 300품목의 농산물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이 중 150여 가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생산자들 또한 연중 판매를 통해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완주는 가족농, 소농, 고령농을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조직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필요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작부체계를

수립하였다. 그 결과, 2012년도 300명 농업인 60품목에서 2017년 말 기준 약 2,500명의 농업인이 300품목의 로컬푸드 출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출하제품의 안전성과 신선도 확보 역시 필수적이다. 모두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 출하자격을 얻게 된다. 교육은 얼굴있는 먹거리 생산자로서 자긍심과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내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방법, 신선 농산물 판매를 위한 출하규정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고, 매년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초기 읍면 순회 조직화 사진]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총회 사진]

지금의 체계적으로 규모화된 조직은 2010년 로컬푸드 초기, 두 명만 모여도 먼 길 마다않고 가서 마을회관, 논두렁, 읍면사무소를 돌며 하나둘 모으고, 출하자 개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려드렸던 노력의 결과물이다.

로컬푸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농가 조직화 및 교육이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설정의 어려움

많은 직매장이 경험하는 공통된 문제는, 합리적인 가격설정 문제다. 가격설정 문제는 매장운영이 안정화단계에 들어가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직매장에 대한 대표적 부정적 기사는 농약검출, 높은 판매가격을 꼽을 수 있다. 과연 로컬푸드 직매장은 무조건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가? 완주군 로컬푸드 직매장에 가면 연중 가격이 고정적인 품목이 몇 가지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상추, 양파, 파 등이다.

일반적으로 로컬푸드 농산물은 도매시장 경매가보다 높고 소매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지만, 시장가격을 참고하기 때문에 대체로 적정한 가격이 설정된다. 문제는 태풍, 폭우, 폭염 또는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가격 등락이 심해질 때이다. 완주군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위와 같이 외부요인에 의해 농산물 가격에 급등락이 발생했을 때에도 연중 일정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되도록 유통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 출하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 일부 관리 품목은 가격 상하한 및 판매량을 조절해 납품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는 전화, 방문, 환불 조치 등을 통해 불만이 증폭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생산비+a'로 농가의 최저소득을 보장한 가격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직매장의 농산물 가격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산을 배려하는 소비, 소비를 생각하는 생산

완주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 단원 모집

- 「완주로컬푸드 모니터링 단원이 되면?」**
- #1 모니터링 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 농가를 방문하는 농촌체험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3 직매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이 수렴되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더 나은 로컬푸드, 지속가능한 로컬푸드를 위하여 관심있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 | | | |
|--------------|--|--------------|---------------------------------|
| 모집기간 | 2017년 4월 1일 ~ 4월 30일 | 자격 요건 | |
| 활동 기간 | 5월 1일 ~ 12월 31일 | | -로컬푸드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 |
|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카톡 신청
전화번호 : 1600-0125
카톡친구 ID : salja12 | | -지역농업과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
| | | | -평일에 진행되는 교육과 직매장 모니터링에 참여 가능한자 |
- 주요 활동 예시**
- 1) 6개 직매장(모악, 효자, 하가, 삼천, 둔산, 혁신) 모니터링
 - 2) 3개 레스토랑(모악, 효자, 둔산)모니터링
 - 3) 농가 생산지 방문
 - 4) 스타터 모임, 커뮤니티 키친, 원데이클래스 등 소모임 진행

완주군은 2014년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주요 활동은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 생산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소비자입장에서 로컬푸드 운영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다. 모니터링단 운영이 정례화되면서, 2018년 소비자단으로 구성된 '(사)세상을 바꾸는 밥상'이 출범했다. 세상을 바꾸는 밥상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요리교실, 농촌 생산현장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관내 학교 공동식단제 도입의 어려움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내 농산물의 소비를 공공영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학교급식체계를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 위생,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영양교사는 구매하는 모든 식재료를 지역농산물로 선택 교체하기란 쉽지 않다.



오늘은 완주푸드 먹는날

2018년 완주군 학교급식의 로컬푸드화를 위해, 완주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영양교사들이 '완주 학교 건강먹거리 연구회'를 만들어 공동식단제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논의과정에서 '오늘은 완주푸드 먹는날' 운영이 결정되었고, 올해 9월부터 봉동초, 봉서초, 삼례초, 상관초, 봉서중, 완주중, 한별고 등 7개 학교가 참여해 월 2회 지역농산물로만 구성된 식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농가조직과 연계하여 필요 수량을 파악·공급하고 있으며, 행정과 연계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영양교사의 걱정을 해소하고 있다. 영양교사는 농산물이 확실히 신선하다는 반응이며, 학생들의 급식반응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전체 학교로 확대된다면, 연간 필요수량을 사전 파악해 계획생산하는 공급 체계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끊임 없는 소통과 현장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로컬푸드 운동이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완주군은 '소비자-생산자 관계 회복'에 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대형마트 및 복잡한 농산물 유통체계에 지쳐있던 소비자에게 '얼굴있는 먹거리'를 강조해 지역농산물은 안전하고, 정이 있는 따뜻한 먹거리라는 인식을 끌어냈다. 그리고 생산자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도록 체계를 만들었다.

당일수확, 당일판매, 농가 직접 판매는 유통과정의 감소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심리적 거리까지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니 시장은 점점 견고해졌고,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자의 재방문율은 90% 후반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완주군은 푸드플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급식 관계자, 행정부서별 담당자, 민간공급자, 지역농가, 소비자 모두와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성공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가장 힘을 쏟는 분야가 공동체 육성과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이다. 농촌지역을 대상으로는 두레농장과 같은 생산공동체와 마을공동체 육성에 힘을 쏟고 있고, 소비자 공동체 육성을 위해서는 '아파트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소통이 단절된 아파트 입주민을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창의적 활동기회 제공을 통해 2015년 12건에 불과했던 아파트 공동체활동이 2017년 160건으로 증가했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다. 2008년 완주군이 로컬푸드 추진을 준비할 때, 민간전문가를 채용해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총괄하도록 했다. 최근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건의되고 있는 '먹거리정책 코디네이터'라 할 수 있겠다.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부서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코디네이팅 작업을 해왔고, 덕분에 지금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협의 분야를 교육, 복지, 일자리, 지역경제, 에너지, 문화로까지 확장하는 게 완주푸드플랜 실행을 위해 핵심 전략이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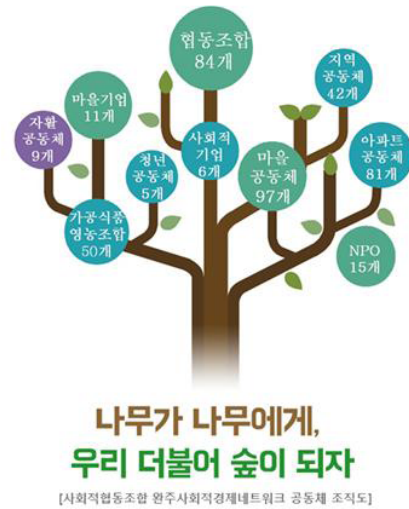
푸드플랜, 공공급식
향후 추진계획

푸드플랜 정신을 주민의 삶으로 : 완주소셜굿즈

로컬푸드 그 다음은 무엇일까? 공공급식 및 복지를 포함하면 완주군 푸드플랜 모델이 구축되는가? 민선 7기에 들어 완주군이 스스로에게 자문했던 질문이 위 두 가지 이다.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선두 지자체로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푸드플랜 이후의 과정을 고민하고 있다.

그 해답을 완주는 ‘소셜굿즈’ 활성화 계획에서 찾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완주소셜굿즈는 로컬푸드 개념을 문화, 교육, 돌봄육아, 에너지 등 주민의 삶 전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로컬푸드 육성을 통해 보여진 지역공동체, 전후방 조직 육성 성과를 농촌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지역리더 및 주민의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푸드플랜 및 소셜굿즈 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9년부터 지역 협동조합 형태의 소셜굿즈COOP을 매년 30개소씩 발굴해 육성한다.

푸드분야에서는 기존의 마을단위 공동체들이 협동조합 전환 또는 법인화 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청년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개별조직이 아닌 서로 연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효율적 연계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처럼 꾸준히

먹거리 산업은 한번 신뢰를 잃으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 반면, 좋은 날이 계속되면 나태해지기 쉽다. 완주군은 그 어려움을 알기에 지금처럼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농산물은 안전해야 하고, 생산자는 솔직해야 하고, 행정은 투명하고, 모든 갈등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완주의 지속적인 계획이자 목표이다.

#2

세종형 로컬푸드 공공급식
369 프로젝트

1 추진배경

-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출범으로 급격한 도시화, 인구 증가 추세
- 평균연령 36.7세로 가장 젊은 도시, 유소년 비중이 높아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음
- 가속화 되는 도시화로 도농격차 심화, 외부유입 젊은 세대와 기존 농촌 주민과의 이질성 증가 우려 → 도농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운동 시작

2 추진 경과
및 성과

- 2014년 로컬푸드활성화 중장기 기본계획 실시
- 2015년 로컬푸드 직매장 상시장터 1호점, 2018년 2호점 개장, 2018년 12월 기준 누적매출 500억 달성, 누적 방문객 227만명
- 2017년 소비자 식생활교육을 위한 식성문화관 개장
- 2017년부터 로컬푸드 운동에서 푸드플랜으로 전환

3 추진 주체
및 체계

- (주)세종로컬푸드 ← 세종시 전담TF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 조례 제정
- (현재)행정직영 컨트롤타워형 공공급식지원센터 → (향후)물류시스템을 갖춘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 먹거리위원회 거버넌스와 연계 정책부서, 일반시민 참여 공식화

4 향후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내 세종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관련 기본 조례 마련
- 2019년 세종시 먹거리종합정책 및 계획 제시
→ 공공급식지원센터 역할 확립 및 기능 강화에 초점, 다양한 식교육 및 먹거리 보장 정책 병행



#2

세종형 로컬푸드 공공급식 369 프로젝트

1

세종시 현황 및 추진배경

인구가 늘어나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계획도시로서 2012년 본격 출범과 동시에 지속적인 도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월 기준 세종시의 인구는 312,537명으로 지속적으로 정주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45년에는 56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수는 충청권 내 대전, 청주, 천안 등에 이어 4대 거점 생활권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속히 늘어나는 인구



■ 2017년 27만 → 2045년 56만(전망)

2017년 주민등록 인구 지역별 평균 연령

지역	평균 연령	지역	평균 연령
세종	36.7	경남	41.9
울산	39.5	충북	42.4
광주	39.6	충남	42.5
경기	39.8	부산	43.3
대전	40.0	전북	43.6
인천	40.5	강원	44.1
제주	40.9	경북	44.3
서울	41.6	전남	45.0
대구	41.7	전국 평균	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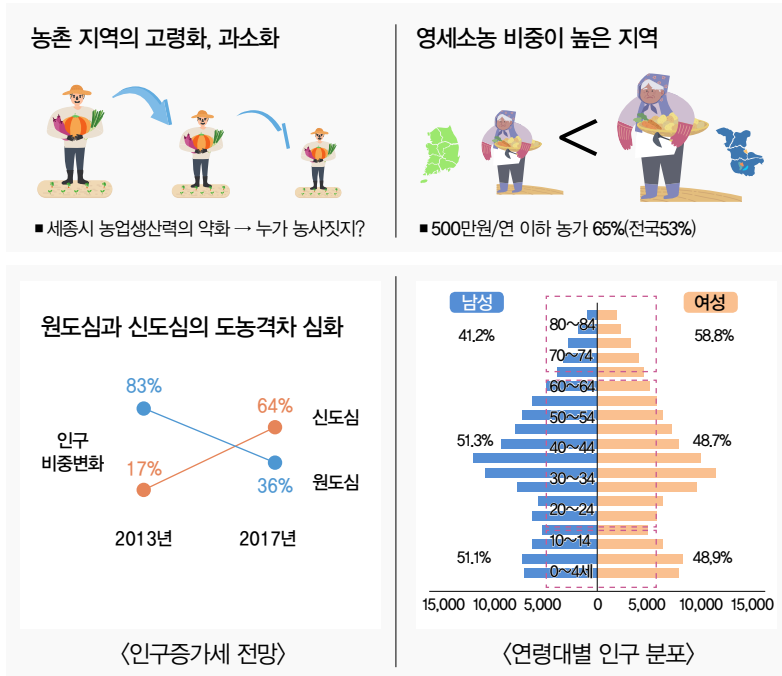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젊은도시 세종

인구증가추세와 더불어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 이는 평균 연령지표이다. 세종시의 2017년 말 기준 평균연령은 36.7세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전국평균연령인 41.5세보다 4.8세 낮다. 또한, 이 수치가 매년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농촌지역의 고령화, 과소화, 영세소농 비중 증가

세종시의 농업과 농촌은 여타 농촌 시·군과 마찬가지로 고령농, 영세소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세소농 비중은 전국 평균 53%보다 12%p가 높은 65%나 된다.



이러한 세종시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먹거리 소비 측면에서 세종시가 지속적인 인구재생산이 가능하며, 유소년 비중이 높아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도시화에 따라 외부에서 유입된 젊은 세대와 기존 농촌 주민간의 인구비중, 생활수준 등 도농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주민 구성원들 간의 이질성이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다.

2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경과

먹거리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공존을 꿈꾸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격 출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세종시는 이런 고민을 시작했다. 가속화되는 도시화에 따른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영세소농들의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도농간 격차해소 뿐만 아니라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주민들간의 동질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세종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로컬푸드 운동을 본격 추진하였다.

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의 태동

세종시는 행복도시 내 인구구조, 지역상권 등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먹거리를 통한 도농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2014년 로컬푸드활성화증장기 기본계획을 우선 실시하였다. 세종시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신도시 내 이전 공무원 등 급격하게 증가한 젊은 소비자 수요층이 요구하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로컬푸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전담조직을 만들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정비를 실시하였다. 또한, 생산농가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우수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 공급,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결과물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이다. 초창기 세종시 로컬푸드는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단순한 판매를 뛰어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와 배려를 통해 도농상생하는 공적 기반의 운동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 2015년: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산실, 싱싱장터

민관 협력형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 건립부지와 비용은 세종시가 부담하고, 중간운영조직은 공공성 담보를 위하여 제3섹터 방식의 농업회사법인 (주)세종로컬푸드 설립을 추진하였다. (주)세종로컬푸드는 자본금 10억 중 시 4.8억, 농협 2.4억, SK 1억, 생산자법인 0.3억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2015년 6월에 출범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세종시 로컬푸드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2015년 9월, 세종시 1생활권 지역에 세종형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인 싱싱장터 도담점을 개장하였다.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예상외로 폭발적인 호응을 일으켰다. 2015년 첫째 연도의 월 평균 매출액은 520백만원, 일평균으로 보면 16백만원 규모로 성공적인 출발신호를 쏘아올렸다.

■ 2016년: 거점제조가공시설 농민가공센터 건립

로컬푸드 직매장의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신선농축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가공식품을 육성하기 위한 2016년 거점제조가공시설인 농민가공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하였다. 농민가공센터에서는 현재 25개 가공품 목이 생산되어,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2016년 지역가공식품류의 생산가공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월 평균 매출액은 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참여농가도 205호로 증가하였다.

2단계 로컬푸드 운동전략 추진

이에 따라 세종시는 본격적으로 2단계 로컬푸드 운동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2단계 로컬푸드 운동 전략은 첫째,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었으며, 둘째, 소비자가 중심이 되고 로컬푸드를 함께 공감하는 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셋째, 마지막으로 싱싱밥상으로 일컫는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확산하는 일이었다. 식교육센터 및 싱싱밥상 분야는 현재 싱싱장터 도담점 부지 내에 2017년 11월 '싱싱문화관'을 건립하였고, 2018년 1월에는 싱싱장터 아름점(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이 개장되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 2017년: 세종시 소비자 식교육 인큐베이팅의 산실, 싱싱문화관

싱싱장터가 생산자들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면, 지난 2017년 11월에 개장한 싱싱문화관은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함께 로컬푸드를 공감하는 공간으로 탄생하였다. 싱싱문화관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식당이 아니라, 식(食)을 통한 도농소통과 시민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공유부엌, 소셜다이닝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싱싱문화관은 개장한지 만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반응과 참여가 뜨거운 상황이다. 특히 1층에 개설된 요리교실의 경우에는 반찬만들기, 일품요리, 베이커리 등 27개 교육과정이 운영중으로 1,593명의 소비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설된 월별 요리교실 참여교육생을 살펴보면 3월에는 6과정으로 출발했지만, 6월에는 11개 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아,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으며, 입소문을 통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층에 개설된 농가레스토랑과 유사한 싱싱밥상의 경우, 제철 로컬푸드 즉석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말의 경우에는 공유부엌으로 사용되어 소비자들이 단순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직접 만들어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싱싱밥상의 경우, 향후 도심 지역 내 싱싱문화관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농가레스토랑과 연계한 운영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상상장터' 운영 현황

- ① 직매장 1호점 : 상상장터 도담점
 - 명칭 :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상상장터 도담점」
 - 규모 : 대지 21,080㎡, 연면적 794㎡, 사업비 19.9억원
 - 운영주체 : 농업회사법인 세종시로컬푸드주식회사
 - 주요시설 : 매장, 카페, 저온저장고, 포장작업장, 안전성센터
 - 매출현황(2015.9~2018.6) : 매출액 355억원, 구매자 1,580,131명(2017년 643,334명)
 - 월평균 매출 : 2015(9~12) 5.2억→16년 9억→17년 12.5억→2018년 13.8억



- ② 직매장 2호점 : 상상장터 아름점
 - 명칭 :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상상장터 아름점」
 - 규모 : 대지 2,231㎡, 연면적 887㎡, 사업비 5.7억원
 - 운영주체 : 농업회사법인 세종시로컬푸드주식회사
 - 취급품목 : 채소류, 과실류, 곡류, 축산물, 가공품 등
 - 매출현황(2018.1~2018.6) : 매출액 39억원, 구매자 205,219명
 - 월평균 매출 : 2018년(1~6월) 6억3천만원
 - 월평균 참여농가수 : 2018년(1~6월) 228호



세종시 공공급식 밑그림을 그린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종시는 2014년 9월 세종시 로컬푸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기본계획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하여, 다른 한축으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의 공적조달체계를 로컬푸드로 공급하는 기본 밑그림을 그렸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이 구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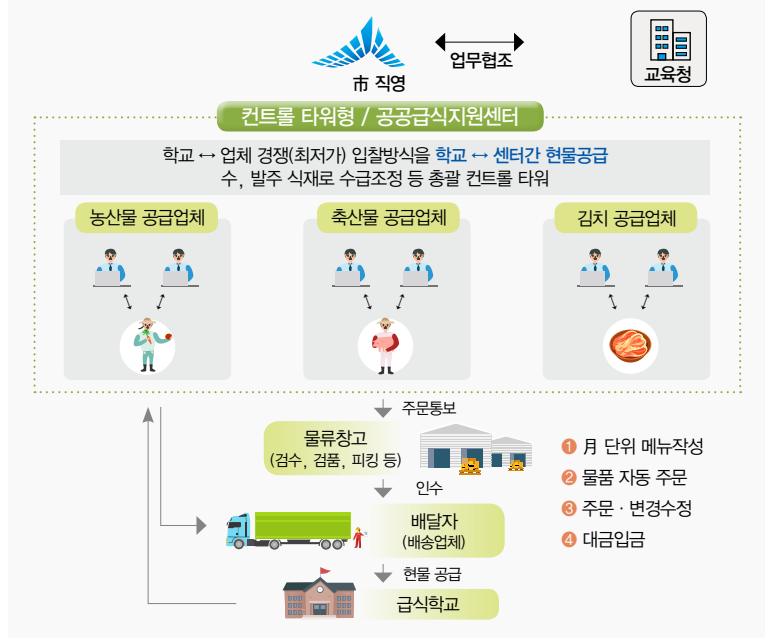
세종시의 학교급식은 별도의 물류시설을 갖추지 않은 행정직영 컨트롤 타워형으로 2016년 유치원 및 고등학교 38곳을 대상으로 하여 현물급식 시범운영을 시작하였고, 2017년 30개 학교가 추가로 참여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타시도와 달리 무상급식 대상 학교를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현물급식사업을 시범사업

초기부터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2019년부터는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계약재배, 수발주, 물류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갖출 예정이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건강을 책임질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특별하다. 2020년 개장 및 본격 운영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2019년부터 본격적인 센터 건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당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여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같이 집하선별장, 피킹장, 저장시설, 물류시설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도담동에서 운영 중인 상상문화관과 유사한 식생활교육관을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체계 및 조감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4-2 생활권 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10,036㎡, 건축연면적 5,301㎡ 규모로 관련 시설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13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재원을 조달하였다.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목표는 3-6-9프로젝트로 일컬어진다. 2020년까지 지역농산물 30품목, 공급비율 60%, 공급액 60억원, 만족도 9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프로젝트명에 담았다. 3-6-9 프로젝트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뿐만 아니라,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주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표연도에서 보듯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되는 해인 2020년까지 해당 준비사항을 사전에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컨트롤타워형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만반의 준비사항을 미리 완료하고 안정적인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을 뛰어넘어 푸드플랜으로

세종시는 2017년부터 로컬푸드 운동 4년의 소중한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푸드플랜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 시작했다. “도시와 농촌이 신뢰와 배려속에 상생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농민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먹거리의 고민을 정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2차례에 걸쳐 푸드플랜과 관련된 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7년 7월에 세종시 3농발전포럼을 개최하여 세종시의 푸드플랜과 농업농촌의 발전방안을 연계하는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2017년 10월에는 시의회를 중심으로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푸드플랜에 대한 농정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는 별개로 세종시의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종시의 푸드플랜 기본계획 수립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해당 기본계획에서는 세종시의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및 청소년들의 아침결식, 패스트푸드 섭취율 등의 사회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종시민들과 로컬푸드 직매장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CSA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의 약자이며, 공동체지원농업으로 해석됨.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 방법으로, 기존의 생산자나 소매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이 아닌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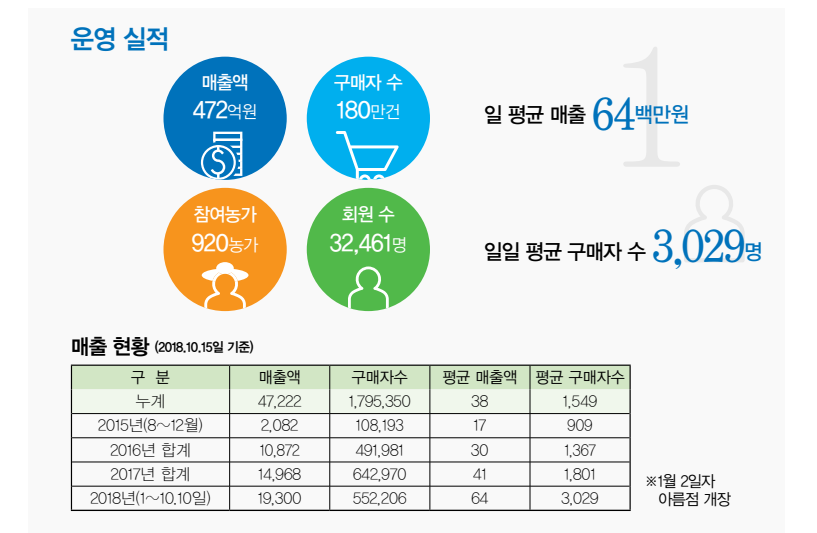
가 함께 참여하는 쌍방향 유통을 의미함)의 확산방안과 이러한 모든 먹거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먹거리위원회와 전담조직 구성 등의 정책제안들이 모색되었다.

세종시는 관련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8년 5월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먹거리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먹거리정책기본계획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먹거리로 건강한 세종시’ 라는 비전 하에 먹거리생산기반 조성, 먹거리공공조달체계 고도화, 먹거리융복합, 안전먹거리관리체계, 먹거리건강복지서비스 제공, 먹거리정책 제도적 기반마련 등의 6대 분야 29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 성공모델인 싱싱장터는 2018년 6월 기준 누적 매출액은 355억, 구매자는 1,580,131명 규모로, 단일매장 기준 전국 최고의 정량적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싱싱문화관은 27개 식교육 관련 요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593명의 소비자, 특히 어린이들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세종시 싱싱장터는 당초 세종시 6천농가 중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하여 월급받는 농업인 2천호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현재 43% 정도를 달성한 상황이다. 향후 싱싱장터 3, 4호점이 개장될 경우 해당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싱싱장터는 이러한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신도시 주민과 기존의 원주민(농민 생산자)이 서로 신뢰와 배려를 통하여 먹거리로 하나되는 도농상생의 모범적인 모델로 발전시켰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4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주체(거버넌스)
및 체계**

또한, 세종시민들의 경우 지역농산물 소비에 대한 체감 안전도가 양호한 편이며, 특히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장터와 같은 유통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향후 사업성공가능성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의 경우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우수성을 평가받은 바 있다.

(주)세종시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로컬푸드 운동

세종시 로컬푸드의 중심에는 (주)세종시로컬푸드가 있다. 농업회사법인 세종시로컬푸드주식회사는 민관협력형 사업 및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농협, 기업 등이 함께 출자하여 2015년 6월에 설립된 조직이다. (주)세종로컬푸드는 싱싱장터 2개소(도담점, 아름점) 및 싱싱문화관 사업을 직접 운영 중이다. 싱싱장터의 경우 운영비 및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생산자의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수수료를 10%로 결정하여 운영 중이다.

세종시는 해당 민관거버넌스 주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전담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15.4)와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15.4)를 제도화하였다. 민간중심의 자율적 운영체계를 독려하면서도 공적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출자뿐만 아니라, 담당 인력을 파견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세종시 싱싱장터는 오프라인 직매장 중심의 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소식 등을 소비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의 블로그도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정직영 컨트롤타워형 공공급식지원센터

세종시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은 행정직영체제로 2018년 현재 컨트롤타워 중심모델로 운영 중이다. 행정 내 공공급식팀에서는 센터운영위원회라는 컨트롤타워를 통하여 학교와의 계약 및 지역농산물 수급관리, 안전성 검사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19년 연내 준공이 완료되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될 경우 자체적인 물류시스템까지 추가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경우 별도의 적격업체 선정과정을 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공급되는 식재료는 친환경 및 지역농산물, 육류(소고기 및 돼지고기), 김치류 등에 한하여 3개 부류를 4개소의 식재료 공급업체를 통하여 조달 공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관리뿐만 아니라,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지정사업 7개, 지자체자율사업 5개, 기타 홍보활동 5개의 관련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함양을 위한 식교육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민선3기 세종시 농정공약, 먹거리계획과 먹거리컨트롤타워 육성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의 시정3기 공약 실천계획에 138번 과제로 세종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이 명문화되었다. 해당 공약실천계획에 따르면 2018년 중으로 먹거리위원회 위촉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먹거리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먹거리위원회 거버넌스 구성 시 연계 정책부서 및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공식화하였다.

5

푸드플랜, 공공급식
수립 및 추진 시
문제점, 해결사례 및
Tips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도농복합형태 도시와 기존 상권이 형성된 도시에는 적용이 곤란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도시개발 초기 기존상권과 경쟁이 없는 신도시의 경우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개발전략에 먹거리 부문을 포함하고 농촌지역, 혹은 농촌형 지자체와 연대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이다. 세종시의 사례에서 보면, 싱싱장터의 성장은 직매장 뿐만아니라, 식교육 체험교육센터인 싱싱문화관과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플라마켓 등의 외부 참여자 활동 등이 연계되었다는 점이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공급하되, 관이 주도하는 방식보다는 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형태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활동은 로컬푸드 직매장 성공과 직결된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기반 구축, 안전성 확보, 교육 등 초기 모델 정립시까지는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연계되어야 한다.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의 성장과 내부 갈등 조정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의 외형적 성장에는 아픈 경험과 치열했던 갈등 조정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점으로 부각됐던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싱싱장터 위탁운영주체인 (주)세종시로컬푸드에 대한 특혜 시비이다.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직접 출자가 이루어진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적운영조직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홍보하는 부분이 중요했다. 둘째,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매장 내 잔류농약 검사가 판매단계 이후에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점이 뉴스 지면을 통해 확산된 적이 있다. 세종시는 3단계에 걸친 안전성 검사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특히 사후 검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적 예방체계를 강화하였다. 셋째, 싱싱장터의 성장 이후 참여 생산자들과의 크고 작은 내부적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이다. 세종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뿐만 아니라, 싱싱장터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와 참여활동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싱싱장터 앞 광장을 개방하여 다양한 플라마켓, 버스킹 등의 공연 활동이 주기적으

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플라마켓의 경우 지역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도 소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동감 있는 거버넌스 및 홍보활동

학교급식, 공공급식은 다양한 급식 관련 참여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슬기롭게 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급식은 거버넌스가 생명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세종시도 마찬가지였다. 세종시의 경우 급식거버넌스 활동을 통하여 공공급식정책 학부모자문단 구성 및 활동을 전개하였고, 학교 로컬푸드의 날 운영, 세종형 공공급식 추진 선포식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였다. 단순히 학교급식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거버넌스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로컬푸드 현물급식의 우수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다.

2017년도에 로컬푸드 학교급식 튼튼밥상 레시피 뽑내기 대회가 열렸고, 주요 수상작과 본선에 진출한 식단의 레시피를 중심으로 관련 책자가 발간되었다.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학교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부모와 학생, 영양(교)사, 조리사 등이 3인 1조로 구성되어 자율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세종시 학교급식 거버넌스는 딱딱하지 않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준비를 거쳐 실행하고 있다. 학교급식센터는 있으나,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여타의 지역에서는 세종시의 급식 거버넌스 활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6

푸드플랜, 공공급식
향후 추진 계획

세종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세종시는 지난 8월 말 시정3기 공약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하고, 농정분야의 핵심공약실천과제로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2019년 상반기까지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관련 기본 조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종시먹거리위원회는 민관협력의 먹거리 정책발굴 및 조정, 계획수립과 이행평가 등 먹거리정책 전과정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여명 내외의 먹거리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먹거리위원회 내에 5개의 분과위원회 및 50여명의 분과위원을 위촉·구성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먹거리생산분과, 공공급식분과, 먹거리안전분과, 먹거리융복합분과, 먹거리건강복지분과 등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먹거리위원의 위촉 및 구성은 추천 위원뿐만 아니라, 세종시민 중에서 먹거리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율적 공모위원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세종시 먹거리종합정책 수립

세종시먹거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분야별 먹거리정책과 관련된 실태조사, 정책발굴 및 연계방안, 정책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2019년 중으로 세종시 먹거리종합정책 및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도부터 시작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역할 확립 및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안정적인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원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는 로컬푸드 식재료의 공급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식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될 농번기 마을급식과 같이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먹거리보장정책 등도 병행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올 예정인 세종시 먹거리종합계획

당초 목표대로라면 2018년 연내 먹거리위원회 설치, 2019년 상반기 내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다소 지연된 상태다. 세종시는 로컬푸드, 공공급식 등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시작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세종시 먹거리종합계획은 농정부서뿐만 아니라, 복지, 보건, 환경 등 다양한 타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세종시 먹거리종합계획은 그렇게 실천가능하고 현장과 정책 담당부서들의 의지와 바람이 담길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실행될 것이다.

#3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유성구 푸드플랜

요약

1 추진배경

- 1,669개 연구기관이 입주한 국내 제일의 과학도시로, 젊은 인구 급증
→ 평균 연령 36.6세, 인구 구성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음
- 6,077호(30,601명) 농가, 도시 전체 면적의 14.2%가 농지 보유
- 먹거리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먹거리에 불안감 해소 필요
⇒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2 추진 경과
및 성과

- 2014년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 일자리추진단(일자리팀, 사회적경제팀, 로컬푸드팀으로 구성) 구성·운영,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위원회 출범
- 2015년 로컬푸드 브랜드 ‘바른유성찬’ 개발, 로컬푸드 인증 규칙 제정
⇒ 2018년 현재 바른유성찬 인증 172농가(160품목)
- 2015년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 2016년 식품 파일럿플랜트 설립
- 2018년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4개소 운영
⇒ 120개 일자리 마련, 740호 농가조직화

3 추진 주체
및 체계

- 행정 : 유성구 마을자치과(먹거리자치)
-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 공공급식(안)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 거버넌스
: 로컬푸드 위원회(위원장 : 부구청장) → 먹거리 위원회로 확대 개편, 생산자 대표, 주민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영양사, 생산자협의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수시 개최
- 시민사회 거버넌스
: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유성구 푸드플랜 민간 파트너 역할 수행, 30여 단체 참여)

4 향후 추진
계획

- 2019년까지 먹거리 복지 강화, 먹거리 정의 실현
⇒ 지역 먹거리정책의 컨트롤 타워, 먹거리 관련 통합적 추진 및 지원 체계 마련
⇒ 지역사회 혁신체계 구축, 먹거리 정책의 사회적 가치 실현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강화, 도농상생 급식사업 본격 추진
⇒ 공공기관 급식의 단계적 확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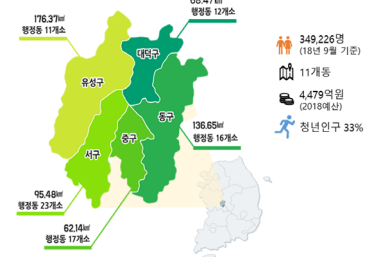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유성구 푸드플랜

1

대전 유성구 현황 및 추진배경

평균연령 36.6세의 젊은 과학도시 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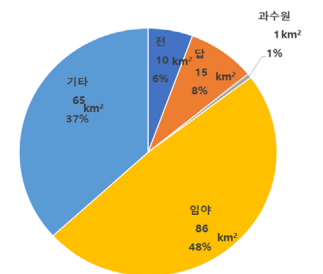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유성구는 1989년 대전의 직할시 승격 당시만 해도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으나, 자치구로 거듭난 지 20여 년 만인 2012년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8년 현재 35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5년 과학특구와 2009년 과학벨트거점지구로 지정되고 1,669개의 연구기관, 69,913명의 연구인력이 입주해 있는 국내 제일의 과학도시이다. 이러한 도시 특성에 따라 많은 젊은 인력이 유입되어 유성구민 평균 연령은 36.6세로 전국 평균인 41.2세보다 낮다. 인구 구성도 30~40대가 가장 많고, 2인 가구 비율이 56%로 가장 높으며,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도시적 산업 구성을 가진 자치구

유성구는 도시지역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을 것이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젊은 농업인들 중심으로 채소, 과일 등을 재배하는 6,077호(30,601명)의 농업인이 있으며, 전체 도시 면적 176.36km²(대전시의 32.7%) 가운데 농지가 2016년 기준 25.1km²로 14.2%를



[유성구 지목별 구성현황]

차지하고 있다. 광역시의 자치구임에도 불구하고, 중소 농촌시군의 농가규모를 갖추고 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유성구의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수요도 다양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전국 평균연령 보다 낮은 젊은 도시이지만, 건강취약계층(노인, 저소득층, 외국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은 20%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거나 월 1~2회에 그치는 인구가 22%나 되어 먹거리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관련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으로, 2014년 7월에 진행된 지역주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95.1%가 먹거리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성구에서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구체적 방안은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이다. 이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주민 대상 사업수요 조사를 했을 때 지역조사 사업을 하면 로컬푸드가 1위로 나왔다.

유성구는 도농복합도시적 산업 구조를 지닌 덕에 관내 생산-유통-소비가 가능하였고, 로컬푸드는 단순 먹거리가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신뢰를 통해 교류하는 관계를 포함하여 지역공동체 운동으로까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유성형 로컬푸드 사업 기본방향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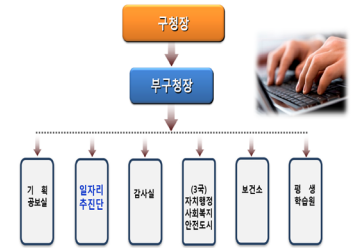
유성구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자 지역 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원주, 완주 등 선진사례 현장 견학을 통해 유성구만의 방향을 찾은 결과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로 만들어가는 도시형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구에서는 먹거리 관련 플랫폼의 역할을 하며 생산물의 안전관리와 시민 인식확산 등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사회적기업에서는 유통·수집·물류·판매 등을 분담함으로써 각자의 장점을 살리며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경과

제도적 기반마련과 조직개편

유성구는 2014년 4월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일자리추진단 내에 로컬푸드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자리추진단은 일자리팀, 사회적경제팀, 로컬푸드팀으로 구성되었는데,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같은 해 10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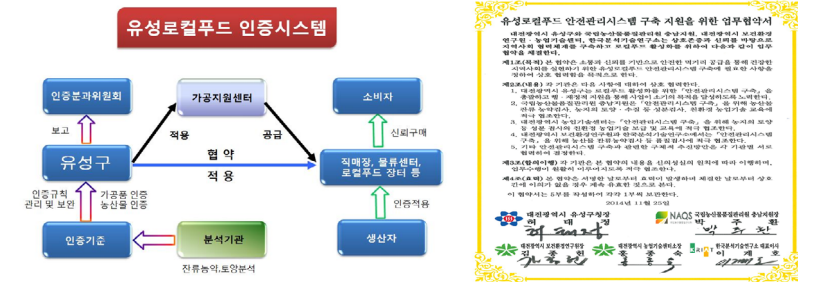


[그림] 2014년 유성구 조직체계

로컬푸드 브랜드 '바른유성찬' 개발, 안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유성구는 로컬푸드 브랜드로 '바른유성찬'을 개발하고, 2015년 3월부터 잔류농약 정밀검사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4월에는 로컬푸드 인증규칙을 제정하였다. 잔류농약 320개 성분에 대해 검사하여 기준치의 1/2 미만인 농산물만 인증하는 등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여, 신뢰가 생명인 로컬푸드에 부합하는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 유성구와 4개 안전관리기관과 협약체결('14.11.2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대전농업기술센터, 한국분석기술연구소(민간기관)
- * 직매장에 최초 유통 전 정밀검사 / 유통 중인 농산물 매월정밀검사(잔류농약, 방사능)
- * 검사내용 : 잔류농약 검사(320성분 이상), 토양성분 검사(8종), 용수 중금속 검사(20종)



도시의 농부를 찾아라, 농업인 조직화 추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6천여 유성구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직화와 공급품목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생산자 발굴단'을 운영하여 마을별로 생산자, 품목을 개별적으로 조사하면서 로컬푸드 참여농가를 조직화해 나갔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바른유성찬 작목별 기획생산을 시작하여, 2018년 8월 현재 바른유성찬 인증농가는 172농가 160품목에 달하고 있다. 또한 농가조직화를 위해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하고, 로컬푸드 포장재, 급식꾸러미 박스, 로고 등 제작도 지원하고 있다

전문활동가, 식품매니저 등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할 인력 양성

로컬푸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2015년부터 로컬푸드 기반 전문가 양성을 위해 로컬푸드 전문매니저, 가공관련 전문가 양성, 소셜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창업 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6년부터는 도시형 먹거리 기반 취·창업 지원 사업으로 청년 창업 지원, 기업지원, 엄마학교(교육), 실버창업학교, 가드너 과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한 취·창업 및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2015년에는 희망마을 가공지원센터를 개장해 현재까지 로컬푸드 상품개발 67종, 가공지원교육도 90회 이상 실시했다. 일부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 * (가공지원센터) 상품개발, 전문가양성, 식품가공창업 컨설팅 등 / 연간 72백만원
- * (지역먹거리 전문인력육성 사업)유통채널, 가공, 소셜프랜차이즈 일자리 과정 / 194백만원
- * (기업지원 및 협동조합 창업지원)상품화 지원, 청년창업 지원 / 354백만원

■ 로컬푸드 기반 전문가 양성(먹거리 매니저, 가공개발, 소셜프랜차이즈)



■ 로컬푸드 기반 전문가 양성(먹거리 매니저, 가공개발, 소셜프랜차이즈)



또한, 식품 파일럿플랜트(2016년 4월)를 통해 로컬푸드 활용 두부, 식초, 소스류 등의 가공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청년창업 8개, 식품제조업 5개, 관련 일자리창출 100개 목표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청년 소셜프랜차이즈 창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리뉴얼, 시제품생산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 '18.6.

- 지역농산물 물류유통 안정화를 위한 플랫폼(대전, 유성지역 및 인근지역 포함)
- 위치·규모 : 덕명동 155번지(대지 2,576㎡)/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578.77㎡)
- * (1층)유통물류센터, (2층)가공지원센터, (3층)교육장, 사무실 등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 가공품 확대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설치 / '15.8.

- 농식품 가공 전문기술 지원시설 / 180㎡
- 행자부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으로 추진(570백만원)
- 반찬가공실, 제과제빵실, 인큐베이팅실 등 / 주민소득창출, 창업지원
- * 2017년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 : 사업비 2억원, 기관표창 등



희망마을가공지원센터

학교·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유성구는 2018년 1월 기준 학교·공공급식으로 초·중 60개교, 유치원 73개소, 어린이집 440개소에 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 가운데 초·중학생 34,175명에게는 무상급식(194억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급식 사업비는 21억원으로 어린이집, 공립·사립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등 53,464명에게 지원한다. 현재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은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인센티브 방식으로 지역쌀 및 지역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서는 로컬푸드로 구성된 급식꾸러미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모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품앗이마을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직매장은 (협)품앗이마을 직접설치 2개소, 자본보조 2개소 구성되어있으며, 유성구는 농업인 조직화와 로컬푸드의 생산·공급,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는 민관 거버넌스형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

■ 공동체플랫폼 직매장 설치 확대 / 4개소

- 지역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직매장 확대 / 지족, 노은, 도안, 관평지역
- 민관거버넌스형 / 유성구 자본보조 2개소 4.5억원
- 생산자 소비자간 관계증진을 통한 호혜시장 발굴확산 / 책임과 신뢰확보



(품앗이마을) 지족동 매장

도시민 삶 속에 가치소비를 일깨우다

유성구는 2015년부터 매년 로컬푸드의 가치와 필요성 인식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학생,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소비자 교육 및 홍보는 먹거리 관련 타운 홀 미팅, 건강 먹거리 대중강좌, 찾아가는 로컬푸드 아카데미, 바른 먹거리 학교교육, 어린이 텃밭학교 운영, 도농교류 농촌체험여행, 로컬푸드 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생산자, 소비자의 호혜적 관계시장 형성을 위한 직거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직거래 장터는 찾아가는 로컬푸드의 날, 지역예술가와 농민·주민이 함께하는 행복팍 프리마켓, '15년부터 유성형 로컬푸드 문화 축제로 자리잡은 로컬푸드 페스티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주민에게 로컬푸드와 농의 가치, 가치 소비를 일깨우며, 시민들의 삶에 로컬푸드가 일상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

■ 생산자, 소비자, 영양사 등 이해관계자 교육

* 대중강좌(3회), 생산자소비자 세미나(20회), 타운홀미팅(1회)



로컬푸드 바로알기 생산자세미나 로컬푸드 바로알기 소비자세미나 나와 나의 공생 유성구 로컬푸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타운홀미팅

■ 텃밭학교 및 바른먹거리 교육 실시

* 로컬푸드 전문가 양성(4회, 115강), 텃밭학교(60강), 바른먹거리 학교교육(30강), 도농교류(12회)



로컬푸드 전문가 양성 어린이 텃밭학교 바른먹거리 학교교육 도농교류

■ 생산자와 소비자 만남의 장

* 찾아가는 로컬푸드의 날(월1회), 로컬푸드 페스티벌(10월) 등



찾아가는 로컬푸드의 날 로컬푸드 페스티벌 대전유성구, 연구원들에게 바른먹거리

■ 지역축제 연계 도시형장터 개최(행복팍(FARM)프리마켓, 벼룩시장) / 연 16회

* 농산물, 생활용품, 공예품 등 다양한 기업, 농민, 요리사, 수공예작가들 참여



행복팍 프리마켓 지역농산물 전통방식 탈곡시연학교 지역작가 수공예 전시판매 도시형 장터 행복팍 프리마켓

3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성과

120개의 일자리 마련과 740명의 농가를 조직화하다

2014~2018년까지의 로컬푸드 정책을 통해 120개의 일자리 마련, 바른유성찬 회원에게는 연평균 10백만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740호의 농가를 조직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자리 창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컬푸드 직매장과 푸드통합지원센터 고용인원이 60명, 창업 15개소 60명 등 총 120명의 비농업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또한, 마을공동체 60개가 만들어져 먹거리 정책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부터 로컬푸드 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바른유성찬 생산자 연합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0월부터는 유성과 대전지역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기획생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먹거리 기반 취·창업 및 회원 현황]

관련 시설	일자리·회원(단위:명)	관련 시설	일자리·회원(단위:명)
로컬푸드 직매장	28	푸드통합지원센터	35
바른유성찬 생산자	171	인근지역생산자	570
로컬푸드 소비자 생협	22,000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	60,000 (30개 단체)
먹거리 연관기업	52 (10개 단체)	공동체현황	170개

* 로컬푸드 관련 연관기업 현황 : OB연구소(제과제빵), 팜팜협동조합(유통), 열린부두막(도시락), 손수레(도시농업), 놀이터(건강카페), 다운(로컬푸드가공), 육지해네(수산물 가공), 농부의부엌(반찬가게), '팜' 협동조합(교육센터), 손수레(도시농업양성기관) 등

4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주체(거버넌스) 및 체계

로컬푸드 위원회를 먹거리위원회로 확대개편

유성구는 로컬푸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과 품앗이마을 업무협약을 2014년 8월 체결하고, 우수 지역농산물 공급,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 수익금 사회환원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민간의 구정 참여 확대와 사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로컬푸드 위원회를 3개 분과(기획정책 분과, 인증심의 분과, 교육·홍보 분과)로 구성하여 2014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2월까지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2기 먹거리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기존 로컬푸드 위원회를 '먹거리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 구성도 공공급식과 먹거리복지,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 보존, 건강한 식문화와 먹거리 공동체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해 생산자대표, 주민협의회, 사회적협동조합, 영양사, 생산자협의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소통 체계]

생산자대표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 바른유성찬 생산자 10명 이내 • 로컬푸드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주민협의회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 10명 이내 • 지역형태에 맞는 로컬푸드 직거래 실행방안 모색 	
도시락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및 관련 업체 • 다품목, 소량생산, 다양한 가공식품 공급을 위한 방안모색 	
영양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 어린이집 유치원 대표, 영양사, 생산자 등 15명 • 영유아 대상 급식꾸러미 배송 관련 협의 조정 	
생산자협의체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공무원 등 10명 내외 •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다품종 생산자 협의체 운영 방안 논의 	
생산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 생산자 100여명 	

먹거리관련 시민사회 거버넌스

2017년 9월 유성구과 대전시의 먹거리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이 중심이 되어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유성구 푸드플랜의 민간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전푸드플랜네트워크는 도시지역에서 먹거리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먹거리에 기반한 다양한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초자치구 단위로 구별 네트워크 조직을 운영하고, 생산-유통-소비 영역별로 고유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 푸드플랜 네트워크 참여조직]

구분	생 산	유 통	소 비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 생산자 • 충청권 생산자 •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내식(생협 등) • 외식(레스토랑, 엄마밥상) • 급식(학교, 공공,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 먹거리 공동체 • 교육단체/환경·시민단체 • 사회적 경제
제안 단체	대전지역	물 류	마을 공동체
	1. 바른유성찬생산자협의회 2.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 연합회	품앗이 마을	1. 자치구마을공동체넷협의회 2. 마을공동체활동가포럼
	충 청 권	내 식	건 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천 - 옥천살림 • 금산 - 금산살림, 금산친환경연합회 • 논산/계룡 - 논산친환경연합회, 논산로컬푸드협동조합 • 부여 - 친환경연합회 • 공주 - 다살림로컬푸드협동조합 • 세종 - 세종품앗이마을 • 충북 - 흙살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살림대전 2. 품앗이생협 3. 대덕품앗이 4. 대전로컬푸드라미아온 협동조합 5. 옥지해녀협동조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외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거리·교육·시민·환경단체〉 1.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 2. (사)한살림대전식생활교육센터 3.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급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시민단체〉 대전MCA 대전호보전문운동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 1. 사회적경제대전플랜 2. 사회적경제실천연구소협동조합

5

푸드플랜, 공공급식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한 문제 해결 TIPS

민관거버넌스 중심 로컬푸드망 구축으로 시민참여 증대

유성구는 로컬푸드 시스템의 구축을 민관협치로 진행해 왔다. 민관협치 방식으로 지역공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사회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기존의 행정 주도적인 서비스 개선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현재를 진단하고, 답도 찾아가는 시민 타운홀 미팅과 같은 '과정 중심적 거버넌스'를 추구했다.

유성구는 도시형 로컬푸드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 주체를 만나고 협의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생산-유통-소비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타운홀미팅]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 내부의 기술과 인적자원을 공동으로 관리, 개발하고 사업화하였다. 사업구상 초기단계에서 가장 큰 고민과 과제는 예산 확보와 지원이었고,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민-민, 민-관, 관-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생산의 책임은 '바른유성찬 생산자연협회', 소비와 관련한 참여와 활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주민공동체, 로컬푸드 인증제는 민관의 안전성 관리기관, 유통은 전문적 유통관련 기업이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상호협력하도록 했다. 그 결과 관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조직화하여 유통, 판매를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로컬푸드 관련 공적인 이슈나 현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폭넓게 이끌어 냈다.

더불어 같이 살고자하는 건강한 지역업체와 상생을 도모

유성구가 먹거리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초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구의 재정적 자율성이 부족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산 부족 문제에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자체자금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1호를 설치한 것이다. 민간 협동조합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기가 되어 유성구는 로컬푸드 사업을 본격화하고 농업인 조직화에 나설 수 있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3개의 직매장 개설과정은 행정에서 일부 지원하면서, 바른유성찬 인증 농업인도 늘러가고, 농업인의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4호점까지 직매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품앗이마을 협동조합은 매장설치비, 운영비 등으로 약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품앗이마을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사업인 소셜프랜차이즈 창업보육 사업을 유성구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피브릿지 협동조합의 '국수나무' 사업모델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 지원 및 기술전수에 대한 로열티를 받지 않는 대신 로컬푸드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5억 정도 투자가 되었으며, 10개 업체가 창업하여 현재 6개소가 운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먹거리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애로사항 가운데 한 가지는 물류시설, 직매장 등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땅값, 임대료가 비싸서 가용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 지역 내 건강한 사업체나 사회

적 협동조합 등과의 연대를 통해 해결책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유성구는 건강한 경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 조직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어려움을 해결했다.

다양한 정부 부서의 지역활성화 정책을 활용한 푸드플랜 추진

2015년 먹거리 정책을 시작할 때 도시지역인 유성구는 농식품부 정책사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사업을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교육, 인력양성, 홍보, 매장 운영 지원, 사회적일자리 및 창업보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였다.

유성구처럼 농업분야 예산마련이 어려운 자치구는 유성구가 했던 것처럼,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 육성 등 여러 부처의 사업을 활용해 먹거리 정책을 기획·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2015년 일자리추진단이 추진한 중앙정부 사업]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덕밸리 벤처 전문인력 양성 -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전문인력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 활동 -211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성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참:누리] -50백만원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마을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푸드 가공지원센터 시설조성 -57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20백만원

도시 먹거리 정책을 장기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운영

유성구가 사회적경제조직, 먹거리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농업인을 이해하고 물류사업 기획·추진 경험이 있는 생협 출신의 인력을 전문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책 및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별도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유성시 푸드플랜 수립 시 강조하는 '민과 관'을 잇는 중계자, 즉 코디네이터 역할을 소화할 전문가를 사업초기 확보한 것이다. 타 지자체에서도 먹거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제 활동력과 더불어 네트워크 능력, 사업기획 능력이 있는 우수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6

푸드플랜, 공공급식
향후 추진계획

제2기 유성구 먹거리정책 :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사회혁신체계 구축

유성구의 먹거리정책은 2014~2017년까지를 제1기로 볼 수 있는데, 지역주민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 확산, 안전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 마련, 친환경급식기반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먹거리 기반을 구축한 시기였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할 제2기에는 주민의 먹거리 복지를 강화하여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며, 2020년부터 시작되는 제3기에는 순환과 공생의 공동체 강화, 지속가능한 도농상생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기 먹거리정책은 다음의 3가지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역 먹거리정책의 컨트롤 타워, 먹거리 관련 통합적 추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로컬푸드 위원회를 '먹거리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4개 분과로 운영하면서 먹거리 안전·교육, 공공급식과 먹거리 복지,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보존, 주민자치와 먹거리공동체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구 먹거리 위원회 분과 구성(안)]

〈1분과〉 먹거리 안전·교육·홍보	식품 안전관리, 위해요소 차단, 외식 등 먹거리 환경조성, 생산-소비 먹거리 교육 및 홍보
〈2분과〉 공공급식·먹거리 복지	먹거리 공적 조달체계 구축, 먹거리 안전 및 안정적 공급 실현, 먹거리 복지 강화
〈3분과〉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활성화, 도농상생 먹거리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도시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4분과〉 주민자치·먹거리공동체	먹거리 공적 조달체계 구축, 먹거리 안전 및 안정적 공급 실현, 먹거리 복지 강화

둘째, 주민자치형 먹거리사업 확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주도형 마을·사회적경제 모델 성공사례 확산을 통해 지역 사회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성구 제2기 먹거리사업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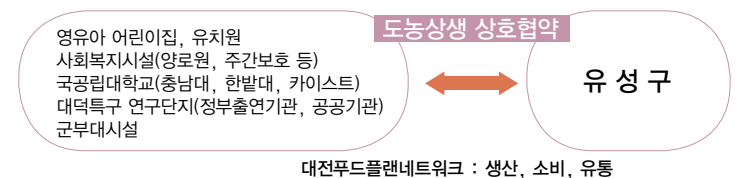
주민자치형 먹거리사업	먹거리 관련 공동체 교육	어린이 텃밭 학교, 바른먹거리 학교교육, 먹거리 아카데미 등 공동체 교육 개편 확대
	먹거리활동가 양성	건강먹거리 활동가, 식품가공 전문가, 도시농업전문가 등 연계를 통한 먹거리 활동가 양성 지속 추진
	공동체 활동 지원	마을밥상, 반찬배달사업 등 먹거리 관련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 커뮤니티 케어 연계 추진
	공동체 기반 조성	어린이 식당, 로컬푸드 도시락, 반찬가게 등 지역농산물 활용한 먹거리 사업 지속운영 및 공동체 간 연대 증진
	도농상생 먹거리 페스티벌	지역농산물,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물품 Off-line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장터 운영과 도농상생 페스티벌 개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지원	주민참여예산, 마을축제, 마을밥상, 방과후 마을돌봄 서비스 어린이식당 운영,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마을 커뮤니티 공간(5개소), 공동체 지원센터 등
성공 사례 확산	거버넌스 기반 도시형 푸드플랜 모델 확산	유성구의 건강·교육·에너지·교육·문화 등 주민의 생활전반에 걸친 관련정책의 연계 추진으로 지역사회 혁신시스템 도입 및 확산

[주민자치형 먹거리사업 사례_건강 한 끼 With Go프로젝트 '동네 함이 어린이 식당']

- 방과후 건강 먹거리와 교육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선정)
 - 시간·장소 : 2018. 10. ~ 12. / 마을카페 놀이터(대표:정순영)
 - 대상·내용 : 초등학교생 200명, 주 2회정도 로컬푸드 간식과 먹거리 교육, 돌봄제공
 - 사업비 : 40,000천원(특세) / 간식 19,200천원, 교육 20,000천원 홍보 등 800천원
 - ※ 공모선정(6월)→국민디자인단 회의(7월~9월)→참여자모집(9월)→추진(10월~12월)
 - ※ 참여자모집 : 노은초, 상지초, 지족초, 하기초 참여신청서 배부 및 선착순 모집

셋째,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강화하고 도농상생 급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농산물 공급 및 소비 확대를 위한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간 민·관·산·학 MOU를 체결하고, 지역농산물 공적 조달을 위해 ①푸드통합지원센터 내 공공급식 수발주 시스템 구축 ②공공급식센터 설치 ③대전시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 통합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주, 세종, 논산, 옥천, 금산, 영동 등 인접지역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농상생 체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산·학의 도농상생 MOU 추진(안)]



[학교, 공공급식 연계 식재료 공적조달(안)]

- (1단계 : 대전·인근지자체 식재료 조달 기반조성)
 - 농산물, 가공품, 축산물 등 식재료 품목 전체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및 협력체계 구축
- (2단계 : 식재료 공통 기준 마련)
 - 식재료 공통 품질기준 마련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먹거리 기본권 실현
- (3단계 : 도·농상생 공적조달)
 - 식재료 수·발주시스템, 물류배송 등 급식 센터 간 지역농산물 공적 조달 체계 구축 및 전 품목 확대 추진
- (4단계 : 도·농상생 교류 활성화)
 - 생산자·소비자 교류 활동 증진을 위한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하는 다양한 연대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약 8천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질 향상과 영양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구매시 1식당 220원의 급식비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서도 급식비 지원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급식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농산물 공급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내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안)]

- (직영운영) 쌀 등 주요품목 공급 후 공적조달체계 구축 시 품목확대 추진
 (위탁운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추진
 (일반음식점 운영) 과학관 등 <농가레스토랑> 등 직영 운영

#4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충남 지역순환식품체계

1 추진배경

- 민선 5기-6기 대표적 농업·농촌 정책 '3농 혁신' 프로젝트 추진
: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로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혁신하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형 농정추진 체계
- 2017년 3농혁신의 5대 핵심 전략과제 중 하나로 '충남형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인 지역순환 식품체계' 선정 및 추진

2 추진 경과
및 성과

- 2011년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13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도 전체 유·초·중·고 학생 276천명 중 89%가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 109개 품목 767농가 조직화를 통해 2017년 기준 239억원 출하 (농가당 평균 27백만원 소득)
- 2014년 컨트롤타워형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 2017년 기준 46개 로컬푸드 직매장(400억 매출, 4,038농가 참여), 24개 정례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몰(103억 매출) 운영

3 추진 주체
및 체계

- 행정 : 충청남도 농산물유통과 지역순환식품팀
- 공공급식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충남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설립 예정)
- 거버넌스 : 먹거리위원회(먹거리 정책 총괄, 기존 3농정책위원회의의 기능 이관 예정)와 함께 먹거리포럼(공동학습프로그램), 먹거리워킹그룹(정책 현안과 이슈 도출) 운영

4 향후 추진
계획

- 2019년 상반기 내 먹거리 관련 기본조례 제정,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광역단위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학교·공공급식 및 광역직거래 물류센터, 농산물전처리센터, 지역순환식품 가공시설 등을 포함한 광역단위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준비 중



#4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충남 지역순환식품체계

충남도 3농혁신과 지역순환식품체계

충남하면 떠오르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은 ‘3농혁신’이다. 3농혁신은 민선5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민선6기까지 충남도의 3농(농어촌, 농어업, 농어업인)을 혁신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다.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가 되어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혁신하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형 농정추진체계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다.

충남에서 3농혁신 정책이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등장한 배경에는 농산물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현실에서, 충남도 역시 매년 빠른 속도로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영세소농으로의 양극화 분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의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시, 아산시 등 서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업은 충남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으로, 농업의 쇠퇴는 곧 지역경제의 쇠퇴를 초래함을 의미했다.

한편으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 및 국민적 관심 확대, 친환경 농산물 등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의 대응전략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시군, 정책수혜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여 3농혁신 핵심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체계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설정된 5대 핵심 전략과제 중 하나가 충남형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인 지역순환식품체계(local food system)이다.

1

충청남도 현황 및 추진배경

2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경과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의 핵심,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의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의 핵심 전략은 도내 15개 전 시·군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과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기획·총괄하는 광역급식지원센터 설립이었다.

기존 학교들이 개별적으로 급식 품목을 조달하다보니, 식재료의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납품 단가가 우선시 되어 식재료의 품질, 위생상태 등 식재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충남도와 교육청간 초중학교 무상급식 협약체결을 기점으로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1년,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2013년도에 설립 운영을 시작하였다.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 9월 현재 도내 13개 시군에 설치가 완료된 상황이며, 홍성군은 별도의 급식센터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계룡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논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금산군은 마지막으로 급식센터 설치를 준비 중에 있다.

현재 도 전체 유·초·중·고 학생 275,507명 중 89%가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행정직영형 및 부분위탁형 등 다양한 사업유형으로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단위: 명, 교, 백만원)

구 분	천안센터('16.3)	공주센터('16.4)	아산센터('12.3)	논산센터('16.3)
학생수/학교	94,482/241	13,496/88	45,901/133	14,792/92
센터유형	물류민간위탁	물류민간위탁	물류민간위탁	물류민간위탁
물류운영	농협조공(11)	우성농협	아산원예농협	논산계룡농협
인력현황	26(공무원3)	11(공무원3)	17(공무원5)	35(공무원3)
'17 매출액	29,568	11,467	29,422	14,721
친환경/지역산	59% / 58%	42% / 72%	66% / 60%	48% / 53%
작부 구축	290농가 43품목	78농가 26품목	35농가41품목	29농가 42품목

구 분	당진센터('11.3)	부여센터('15.5)	청양센터('14.3)	홍성센터('14.3)
학생수/학교	20,497/89	6,343/68	2,559/34	13,034/70
센터유형	통합민간위탁	행정직영	행정직영	행정직영
운영주체	해나루조공(14)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인력현황	15(공무원2)	7(공무원2)	10(공무원2)	10(공무원5)
'17 매출액	12,322	5,145	2,104	8,337
친환경/지역산	53% / 53%	70% / 66%	63% / 73%	65% / 48%
작부 구축	29농가 31품목	124농가 21품목	56농가50품목	78농가40품목

구 분	보령센터('17.3)	서산센터('18.3)	서천센터('18.3)	예산센터('17.3)
학생수/학교	11,061/84	22,521/96	4,924/53	8,059/68
센터유형	행정직영	행정직영	행정직영	행정직영
운영주체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인력현황	18(공무원6)	13(공무원3)	5(공무원3)	7(공무원5)
'17 매출액	6,604	-	-	5,412
친환경/지역산	48% / 57%	-	-	52% / 38%
작부 구축	46농가 43품목	87농가 43품목	13농가27품목 (주잡곡제외)	9농가19품목 (주잡곡제외)

전국 유일의 컨트롤타워형 광역급식센터 운영

충남도는 2014년부터 광역급식센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국 최초로 컨트롤타워형 급식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광역급식센터에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군 단위센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급식정책 분야에 대하여 광역단위로 풀어내는 역할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계약재배와 물류에 대한 계획, 학생과 영양교사 대상 친환경 농산물과 좋은 식재료에 대한 식생활 교육, 식재료 표준화와 품질기준 마련, 식단 개발, 공동구매 등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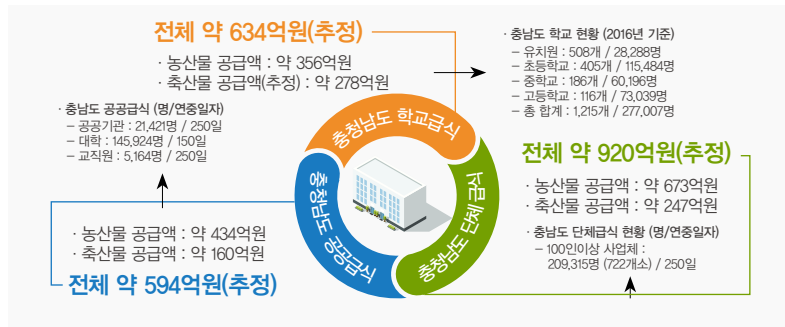
공공급식을 비롯한 공공조달 확대

충남도는 민선7기 공공급식 공급확대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8년여 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된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먹거리지원사업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의 경우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인프라는 친환경 및 지역 식재료의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다른 지역보다 매우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미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기관 급식을, 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내 어린이집 및 서울시 노원구 어린이집 공공급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시학교급식지원센터도 서울시 학교급식 및 관내 어린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공공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경과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취약계층 먹거리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행정실무TF를 구성하여 먹거리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사회복지분야의 다양한 정책들과 먹거리계획을 연계할 경우, 현금지원 방식에서 현물지원방식으로 정책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적 조달방식의 도입이 훨씬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산시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도시락공급사업을 주도하는 먹거리복지급식센터를 별도로 건립·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충청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먹거리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직거래 공급망 확대 사업 : 로컬푸드사업 중심

충청도는 지역농산물 공급망 확산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외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비롯한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다.

2013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확산을 추진하였고, 2017년 기준 도내에는 46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 및 24개소의 정례직거래장터가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우 2015년 25개소, 2,084농가가 이용하였으나, 2017년에는 46개소로 확대되어 400억 매출규모에 참여 농가도 4,038명으로 지속 확산 추세에 있다.

오프라인 직거래채널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본다면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도 독자적으로 운영 중이다. 충남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농사랑의 경우 2014년 26억 매출규모에서 2017년 114억원으로 매출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충청도는 대전지역에서 대전MBC 및 논산시, 서천수협 등과 연계하여 별도의 광역직거래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광역직거래센터는 기존 대전MBC가 주관하여 운영하던 푸른밥상직

3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성과

친환경 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충청도 푸드플랜의 근간이 되는 학교급식사업은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 친환경 로컬푸드를 공급할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며 지역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2015년부터 시·군별 작부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시작 당시 4개 시·군 94개 품목 372개 농가로 시작해 2017년에는 12개 시·군 109개 품목 767개 농가로 확대되었다. 또한 생산자회가 작부체계 구축을 통해 급식에 출하한 총 금액은 239억원으로 농가 당 평균 27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 편차는 있지만 현재까지 지역산 공급비중은 50%대를 달성하고 있는 단계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급식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충청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계획에 맞춰 식재료 품목 및 가격 결정 등이 가능한 독자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2013년도부터 전산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수·밭주, 검수·

검품, 정산관리 등 급식센터 업무 효율화를 위한 광역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양교사들과 30여 회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각 시·군별로 약 6만여개 수준의 식재료 명칭을 6,000여개로 간소화·표준화하였다.

현재 충남도 전 시·군에 시스템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세종시에서도 시스템 사용 허가를 요청하여 충남도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추진중인 타 지역까지 확산도 기대되고 있다.

이 시스템 개발로 학교급식 농산물 수요량 통계를 확보할 수 있어 품목별, 시기별 출하량 예측에 활용하고, 센터와 학교, 급식업체간 소통문제가 해결되어 관련 업무량이 크게 경감되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지역순환 가공품의 학교급식 공급

충남도는 지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데서 더 나아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순환 가공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첫 시작이 2017년도부터 GMO 없는 충남산 콩을 사용한 전통장류를 학교급식에 공급한 것이다.

충남산 콩을 사용하는 전통식품인증업체를 도에서 선정하여 위생·안전 점검을 마친 뒤 차액지원을 통해 각 학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2018년도에는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14개 시·군 553개 초·중학생 17만 2549명에게 총 71t을 공급하였다.

충남도는 이러한 전통장류 공급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힘입어 두부·콩나물, 충남밀을 활용한 핫도그·짜장·카레 등의 학교급식 조달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도의 시도는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 농가 및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의 선진 사례로 발돋움 할 것이 기대된다.

충남 농정 관련 거버넌스 체계

충남도의 농정 관련 거버넌스는 3농혁신위원회로 일컬어진다. 민관협치농정시스템의 대표주자로 소개될 만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새로운 시도로 민선7기에서는 3농정책위원회로 그 이름을 달리하여 출발하였다.

4 푸드플랜, 공공급식 추진 주체(거버넌스) 및 체계

충남도는 당초 먹거리거버넌스체계 구상을 위하여 3농정책위원회의 기능은 단계적으로 농어업회의소로 이관하고, 먹거리 정책 관련분야는 먹거리위원회로 확대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먹거리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당분간은 농어업회의소, 3농정책위원회, 먹거리위원회가 동시에 운영되는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될 예정이다.



[기존 충남 3농혁신위원회와 먹거리위원회 비교]

구 분	3농혁신위원회	충남먹거리위원회
학생수/학교	충남 정책자문위원회 및 운영조례	충남 먹거리 기본조례 별도 제정
운영주체	농어업 관련 정책자문기구	먹거리 관련 정책자문기구
인력현황	농어업 관련 정책	농어업 + 먹거리 연계 정책
'17 매출액	농정국 + 해양수산국	좌동 + 복지보건국 + 기후환경녹지국
친환경/지역산	37명 + @ 농어업인단체(12), 기능단체(7) 유관기관(6), 연구/학계(6) 언론/기타(3), 도/도의회(3)	30여명 + @ 농어업인단체, 유통가공경영체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연구학계 언론/기타, 도/도의회
작부 구축	생산-유통-소비-지역-역량	먹거리 안전 생산체계 구축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지역먹거리복지시스템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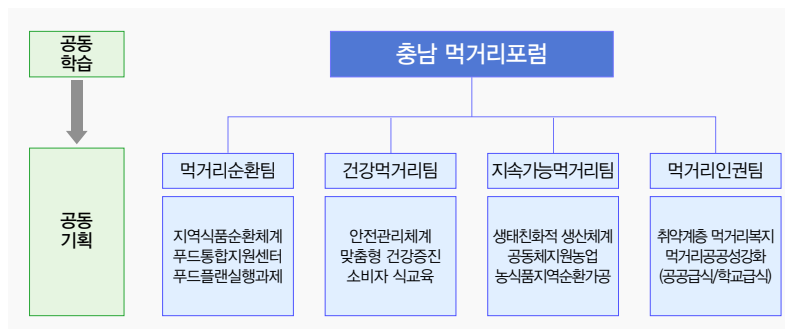
충남 먹거리 포럼 및 워킹그룹 추진 체계

충남도는 2018년 내로 먹거리 관련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광역단위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단, 먹거리위원회의 경우 농정부서를 뛰어넘어서 범부서적, 범정책적 범위를 다루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2018년에서 2019년 상반기 중으로는 가칭 충남먹거리준비위원회와 같은 민관협치형 예비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중인 충남푸드플랜 계획 수립 연구와 병행하여 공동학습

프로그램으로 충남먹거리포럼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먹거리주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동학습을 통한 역량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포럼과 달리 먹거리워킹그룹 부문에서는 충남도의 먹거리 분야별 정책 현안과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마련하는 공동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각 워킹그룹에서는 주요한 현안과제별로 관련 참여자의 발제와 토론, 개선과제 도출이라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충남먹거리정책 추진방향을 공동으로 기획,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거버넌스 소통으로부터

충남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 시·군 설립 완료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결론론적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이 속도를 붙이기 시작한 것은 3년여밖에 안된다. 2016년까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정 등에 집중했던 시기이다. 기존 학교급식 납품업체와의 갈등, 학교 영양(교)사들과의 의견 조정, 생산자 작부체계 구축 등 학교급식 분야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 보니 회의론도 있었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비롯한 먹거리공공조달과 관련된 해법은 정해져 있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여러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됐다 하더라도, 신규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결코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시행착오는 줄일 수 있겠지만, **거버넌스 활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5
**푸드플랜, 공공급식
수립 및 추진 시
문제점, 해결사례 및
Tips**



먹거리정책의 첫 번째 허들, 부서의 벽을 넘어야

충남도의 민선7기 먹거리정책 방향은 학교급식센터를 활용한 공공급식 확대에 공약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아무리 공약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공급식 접근을 위해서는 부서간 협업체제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도청 내에 먹거리공공급식, 복지 관련 부서만 하더라도 과단위로 볼 때 10여개 이상의 과와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충남도는 이러한 부서간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 먹거리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부서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실무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TF를 통하여 기존 정책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먹거리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연계가능한 사업군을 발굴하는데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단계에서는 먹거리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서별 업무협조를 명확히 요청하고, 관련 결과물을 공유할 계획이다. 물론, 행정실무TF 뿐만 아니라 먹거리포럼, 워킹그룹 등에도 관련 부서담당자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먹거리정책은 상상력으로부터 출발

먹거리정책은 상상력으로부터 출발한다. 기존에 누군가 해왔던 관성적인 사업과 정책으로는 푸드플랜을 담보하기 어렵다. 충남도는 음식물폐기와 관련된 환경적 문제를 선언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음식물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정도를 공유하기 위하여 먹거리정책에 음식물폐기 문제가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음식물 폐기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통제와 실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한 조직을 탐색했고, 학교급식을 그 타겟으로 삼아 음식물폐기와 관련된 경진대회를 실천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먹거리정책과 관련된 분야는 다양한 상상력이 발현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새롭고 창의적인 먹거리 정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6

푸드플랜, 공공급식
향후 추진계획

충남 푸드플랜, 이후 기본 구상

비전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
----	-------------------------------

목표	계약생산(150품목) 통합출하회(5,000명)	직거래 광역물류(110억) 학교/공공급식(290억)	맞춤형 통합지원(1,000명) 먹거리 시민교육(10만명)
----	------------------------------	---------------------------------	------------------------------------

전략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공공조달 및 관계형(직거래) 시장 확대	먹거리 복지·교육 및 공동체 강화
----	---------------	--------------------------	-----------------------

추진 과제 및 내용	계약 및 기획생산관리	직거래 물류센터	맞춤형 통합지원
	- 기획생산품목의 확대 - 작부구조 기반 계약생산 강화 - 생산관리 기준 및 매뉴얼 마련	- 직매장·장터 등 직거래 광역물류 체계 구축 - 학교급식·직거래 등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 장애인·저소득 독거노인 등 맞춤형 통합지원 - (상담, 먹거리제공, 검사) - 지역사회복지통합지원 체계 연계
	통합 생산자 출하회 육성 및 역량강화	학교/공공급식	먹거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 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생산자 출하회 통합 육성(계약 생산 연계) - 생산자 출하교육(필수) 등 역량강화	- 센터 공동구매 기준 정립 및 품목확대 (지역가공품) - 친환경식품 차액지원 - 관내/관외 공공급식 시장 창출	- 먹거리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생산-소비 연계
	안전성 강화 및 인증체계 구축	공동체 식당	생애주기별 먹거리 시민교육 체계 구축
- non-GMO, 무제초제 등 인증기준 마련 - 토양·물 등 안전성 검사 강화	- 로컬푸드 시민식당 및 도시락 배달 - 먹거리 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 연계	- 유아중고 학생학교 교육 지역 사회 연계 - 공공급식 먹거리 시민교육 확대	

충남도민의 다양한 먹거리보장체계 구축

충남도는 지역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공급식 공급체계 구축을 넘어서 충남도민의 다양한 먹거리보장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첫째, 지역순환가공식품의 지역 내 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선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식재료를 원부재료로 활용하는 지역순환가공식품의 품질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공적조달과 민간조달 영역으로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학교급식 등을 중심으로 이미 공급되고 있는 전통된장 및 우리밀가공식품 등의 성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지역가공식품기업/경영체를 발굴하고, 이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특히, 푸드플랜 분야에서는 신선 부재료의 비품, 하품도 활용할 수 있는 만두류와 유지작물류를 활용한 지역 식용기름 생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충남도민의 아침결식율을 최소화하고 먹거리를 통해 하나되는 공동체 회복운동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한 아침급식서비스 공급망 구축사업과 농촌지역의 농번기 혹은 마을단위의 공동급식이 가능한 공동체 식당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수요조사를 차근차근 실시해나가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아침을 먹고 다니는 문제에서 건강과 영양, 이웃주민들과의 공동체 성 회복, 로컬푸드 소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충남형 로컬푸드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셋째, 사회복지정책과 연계한 현물지원사업의 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 강화 정책분야이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공공급식조달 확대를 민선7기 중점 농정과제로 구상한 만큼, 기존 사회복지정책들의 추진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시켜나감으로써 로컬푸드 및 친환경과 연계한 식재료 공급망을 확대해 나가하고자 한다.

넷째, 충남도 푸드플랜은 음식물폐기와 관련된 환경문제에도 정책적 접근과 시도를 추진하고자 한다. 금번 푸드플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다양하게 추진되었던 음식물쓰레기 배출감소, 재활용, 자원화 등과 관련된 사례를 경진대회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병행하여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먹거리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충남먹거리거버넌스 활동 강화

충남도는 먹거리기본조례와 관련 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를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푸드플랜 연구와 연계한 공동학습, 기획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농정부서에는 잘 알지 못하는 먹거리 복지, 건강, 영양, 환경 문제에 대한 전문가와 민간위원들을 탐색 발굴하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충남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가시화

직거래 기본계획 수립시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주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시·군 및 경영체 단위의 자체적인 기획생산 및 조달시스템으로는 조달이 어려운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광역단위의 공급시스템으로 연계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또한 학교 과일간식 및 단체급식에서 전처리농산물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시·군 센터단위의 공급은 한계가 있어 이를 광역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충남도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학교/공공급식 및 광역직거래 물류센터, 농산물전처리센터, 지역순환식품 가공시설 등을 포함한 광역단위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시·군 출하회의 과부족 품목에 대한 통합 관리로 시·군 및 광역간 작부체계를 연계하여 광역단위의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공공급식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복지시스템 도입 및 먹거리 인증체계 구축, 먹거리 교육 분야에서의 광역단위 접근모델도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이 될 것이다.

충남먹거리계획 수립 및 실천과제 도출

충남먹거리기본계획도 2019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충남먹거리포럼 및 워킹그룹과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고, 실천 중심적 계획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과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고 운영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조직 구상안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특히, 광역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공적인 운영조직을 설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과관이 함께 먹거리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해나가는 모습, 충남 푸드플랜이 지향하는 건강한 운영체계이다.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수범사례집

